

# 라이벌 정치운동단체의 연합에 의한 정당건설: 민주노동당의 사례\*

정영태 | 인하대학교

본 논문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대립과 경쟁 관계에 있던 두 개의 상의 정치사회운동단체가 하나의 정당에 합류하게 되는 배경과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 이후 서로 다른 이념, 노선,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진보적 정치·사회운동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던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계열의 양대 세력은 1997년 대선 무렵 민주노총과 함께 국민승리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민족해방계열에 속하는 조직들이 대부분 이탈하여 경쟁·대립관계에 있는 정치운동단체의 연합으로 정당을 건설하려는 첫 번째 시도는 좌절되는 듯했다. 그러나 민중민주계열의 진보정치연합과 민주노총 그리고 민족해방계열의 일부 지역조직의 인사들은 1999년 초부터 다시 진보정당건설 사업을 재개하여 2000년 1월에 민주노동당을 창당하였다. 그 후 2001년 하반기부터 민주노동당이 재창당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승리당으로부터 이탈했던 민족해방계열의 조직들이 다시 합류하기 시작하여 2003년 11월 임시당대회가 열리는 무렵까지 민족해방계열의 거의 모든 조직이 민주노동당에 들어왔다. 민주노동당의 회의자료, 인터넷 자료, 주요 활동가 대상 면접자료를 활용하여 라이벌 정치운동단체가 하나의 정당으로 합류하게 한 요인을 탐색한 결과, 사회주의권과 붕괴와 한국정치의 민주화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조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양 계열의 이념과 노선의 차이 축소, 조직의 생존이라는 현실적 이해관계의 일치, 양대 계열 조직 지도부의 전략적 선택과 성공적 협상 등이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조직해체의 위협에 대응하고 나아가 조직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건설에 합류하거나 유인하였으나, 여전히 남아 있던 대북관계 내지 북한에 대한 입장과 조직문화의 차이를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당 이후 파벌로 전환한 양대 계열 조직 간에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의 소지를 남겨놓게 되었다.

**주제어:** 정당건설, 조직통합, 정치운동단체, 이념, 정치노선, 조직문화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인문사회분야, KRF-2008-327-B00017). 익명의 세 분 논평은 본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 I. 서론

### 1. 문제제기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 이후 서로 다른 이념, 노선,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진보적 정치·사회운동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던 민족해방계열의 정치·사회운동진영(전국연합, 전대협-한총련, 전농 등)과 민중민주계열의 정치·사회운동진영(진보정치연합, 정치연대 등)의 양대 세력은 1997년 대선 무렵 민주노총과 함께 국민승리21을 창당하였다.<sup>1)</sup> 그러나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민족해방계열에 속하는 조직들이 대부분 이탈하여 경쟁·대립관계에 있는 정치운동단체의 연합으로 정당을 건설하려는 첫 번째 시도는 좌절되는 듯했다.<sup>2)</sup> 그러나 민중민주계열의 진보정치연합과 민주노총 그리고 민족해방계열의 일부 지역조직의 인사들은 1999년 초부터 다시 진보정당건설 사업을 재개하여 2000년 1월에 민주노동당을 창당하였다. 그 후 2001년 하반기부터 민주노동당이 재창당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승리21로부터 이탈했던 민족해방계열의 조직들이 다시 합류하기 시작하여 2003년 11월 임시당대회가 열리는 무렵까지 민족해방계열의 거의 모든 조직이 민주노동당에 들어왔다.

이처럼, 1980년대 말 이후 진보적 정치·사회운동의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대립하던 라이벌 정치운동단체들이 일시적인(선거)연합도 아니고 일종의 조직통합(organizational merger)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정당으로 합류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 배경과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대립과 경쟁 관계에 있던 두 개 이상의 정치사회운동단체가 하나의 정당에 합류하게 되는 배

1) 일반적으로 민족해방계열은 NL, 민중민주계열은 PD로 표현해 왔으나, 두 세력이 민주노동당에 합류한 이후부터 전자를 자주파, 후자를 평등파로 불렀다.

2) 정치운동단체는 정치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운동단체로 시민이나 정부가 특정한 정책이나 행동(지지 또는 반대)을 취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정당과는 달리 공직선거에 후보를 내는 경우는 드물다. 후보를 낸다면 사실상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Sartori 1976, 61). 이런 점에서 민족해방계열의 전국연합과 민중민주계열의 진보정치연합(1997년 국민승리21과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주도) 특히 전자는 애초에는 정치운동단체였지만 시간이 가면서 정당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국민승리21과 민주노동당의 창당은 정당 간의 조직통합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표 1〉 심층면접 대상

순번	이름	연령	주요 경력	면접일시	정파조직
1	PD-1	40대 후반	중앙당 정책 담당	2009. 2. 25	전진
	PD-2	40대 초반	중앙당 연구 담당		
	PD-3	40대 초반	중앙당 실무지원 담당		
2	PD-4	40대 후반	중앙당 정책 담당	2010. 1. 14	혁신네트 워크
				2010. 11. 1*	
3	PD-5	40대 초반	중앙당, 서울 지구당, 최고위원	2010. 1. 12	전진
4	PD-6	40대 초반	부산시당, 중앙당 기획 및 정책 담당	2008. 10. 28	진정추
5	PD-7	40대 초반	중앙당 조직 담당	2008. 11. 3	전진
6	PD-8	40대 중반	중앙당 홍보 담당, 인천 지구당, 중앙위원	2009. 9. 3	진정추
7	PD-9	40대 후반	민주노총, 국민승리21 홍보 담당, 부산시당	2010. 1. 22	무정파
8	PD-10	40대 후반	울산 지방정치인, 중앙당 연구 담당	2010. 7. 26	진정추
9	PD-11	40대 초반	국승21 및 민주노동당 정책 담당	2010. 8. 11	중앙당파
				2010. 10. 31*	
				2010. 11. 14*	
10	NL-1	40대 중반	경기도당, 경기도 지구당	2009. 9. 9	경기동부 연합
	NL-2	40대 중반	경기도 지구당, 시의원, 중앙위원		
	NL-3	40대 중반	전국연합, 경기도당		
11	NL-4	40대 중반	NL-1과와 동일	2010. 1. 21	''
				2010. 11. 1*	''
12	NL-5	40대 후반	경남 도의원 및 시의원, 중앙당 선출직	2010. 1. 22	울산연합
13	NL-6	50대 초반	인천시당 및 지구당, 중앙당 선출직	2010. 1. 15	인천연합
14	NL-4	40대 중반	NL-4와 동일인	2010. 8. 21	''
15	NL-7	40대 후반	서울일반노조, 서울 지구당, 중앙당 비정규운동, 기획 담당, 중앙당 선출직	2009. 9. 15	서울모임
16	NL-8	40대 후반	인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선출직	2009. 9. 7	인천연합
17	NL-9	40대 초반	한총련, 민주노동당 청년위원회 및 대외협력 담당	2009. 9. 10	한총련

\* 전화를 통한 추가 인터뷰

경과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분석과 면접에 의존하였다. 즉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공식문서, 인터넷 신문을 포함한 언론매체의 보도 및 분석자료, 학자들의 논문과 단행본, 당원들의 카페나 블로그 등 인터넷 자료와 민주노동당 관계자와 활동가 대상 인터뷰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이 중에서 공식문서와 언론보도는 문제발생의 시기와 공식적인 대응,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blog)는 일반 당원들의 인식과 대응, 인터뷰는 공식적인 회의나 기록의 이면에 있었던 사건이나 당사자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면접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면, 면접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진행하였으며, 대상은 민중민주계열(평등파)과 민족해방계열(자주파) 내 주요 정파의 리더 또는 브레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과,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기도(성남) 지역의 주요 당직자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인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 2. 기존 연구 검토

서로 다른 이념이나 노선 또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두 개 이상의 조직(예, 정당 또는 정치운동단체)이 하나의 정당으로 합류한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으나 그 배경이나 요인을 분석한 글은 찾기가 쉽지 않다.<sup>3)</sup>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에 발표된 국내외 연구에서 '조직통합에 의한 정당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는 변수를 중심으로 민주노동당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sup>4)</sup>

조직통합에 의한 정당건설을 다룬 연구에는 국내의 경우 장훈교(2011),<sup>5)</sup> 해외의 경우

3) 전후 서유럽에 국한시켜 보면, 1945년과 1987년 사이 40여 년 동안 정당 간의 조직통합(merger)은 18개에 지나지 않았고, 이 중 44%는 핀란드와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다(Mair 1990). 그러나 그 이후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민주당(Italian Partito Democratico), 독일 좌파당(German Die Linke) 등의 사례가 있고(Coffé and Torenvlied 2008), 제3세계에서는 브라질의 노동자당(Partido dos Trabalhadores) 등의 사례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민자당 등의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글은 드물다.

4) 이런 이유에서 본 연구는 탐색적 사례연구(heuristic case study)라고 할 수 있다.

5) 이외에도 민주노동당의 창당(과정)을 다룬 글에는 김윤철(2009), 조현연(2009, 2011), 임현진(2009), 이창언(2011) 등이 있다. 그러나 임현진의 글(2009)은 원내진출의 배경, 이창언의 글(2011)은 민주노동당의 다수파인 '자주파'의 역사적 기원과 내부 분화과정, 조현연의 글(2009, 2011)은 창당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김윤철의 글(2009)은 당직·공직후보선출이나 의원과 원외

벨랑저와 고드보트(Bélanger and Godbout 2009), 리즈와 케이스(Lees, Hough and Keith 2010)가 있다. 이들은 정당 등 정치조직이 조직통합을 위한 협상으로 하나의 정당을 건설하게 되는 배경과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장훈교의 글(2011)은 민중민주계열 조직들과 민주노총이 연합하여 창당한 민주노동당에 민족해방계열의 조직들이 합류하게 된 배경과, 활동가와 당원들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중민주계열 지도부가 전국연합을 포함한 민족해방계열 조직들을 민주노동당으로 끌어들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민족해방계열 조직들이 민주노동당에 합류한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따른 민족해방계열의 한국민주주의의 성격에 대한 재평가를 들 수 있다. 합법대중정당을 통해 사회의 질적 변혁을 이룩할 수 있는 (서구 수준의) 의회민주주의로 변모했다는 것이다(장훈교 2011, 184-185). 두 번째, 주체역량에 대한 평가이다. 민주노동당과는 별도의 정당을 건설할만한 주체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점이다. 세 번째, 민주적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의 조직적·물질적 토대가 되는 민주노총이 먼저 민주노동당에 합류해 있었다는 점이다(장훈교 2011, 186).

다음, 민주노총과 함께 민주노동당을 창당했던 민중민주계열 조직의 지도부가 민족해방계열을 적극적으로 당으로 끌어들이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진보정당운동과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진보세력 일반(즉 전체)의 통일과 단결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 또는 명분을 부정할 수 없었고, 다른 하나는 민주노동당(민중민주계열)은 취약하나 민족해방계열의 강점인 지역대중조직을 끌어들이 필요성이었다(장훈교 2011, 190). 이처럼, 장훈교는 경쟁과 대립의 관계에 있던 민중민주계열과 민족해방계열의 민주노동당 합류를 국내외 정치적 사건, 대중조직의 동향 등과 같은 외부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해서 양대 계열조직이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 벨랑저와 고드보트도 조직 통합에 의한 신당건설을 외부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sup>6)</sup> 그러나 이들이 제시하는 외부환경이나 대응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훈교(2011)와는 조금 다르다. 이들이 제시하는 외부환경은 득

지도부의 관계 등과 관련된 제도와 지도부의 전략적 선택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이들 연구는 특정한 하나의 변수나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6) 이들은 기존의 세 가지 접근방법 즉 정당의 생애주기 이론(theory of party life-cycle), 외부 충격에 의한 급격한 변화이론(discrete change theory), 선거연합이론(theory of pre-election coalition)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Bélanger and Godbout 2009, 47-48).

표율과 의석점유율의 괴리(disproportionality), 정치자금,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는데 필요한 최저득표율(threshold)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institutional rules)와 유권자의 구성이나 성향(characteristics of the electorate)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응전략은 정당의 이념(ideology)·이미지(branding)·명성(reputation)을 포함하고 있다.<sup>7)</sup> 이처럼, 벨랑거와 고드보트의 글은 두 개의 정당이 조직통합을 결정하게 하는 객관적 조건 중에서도 정치제도와 유권자 성향의 변화, 주체와 관련된 요인으로 이념이나 이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리즈와 케이스의 글은 독일 좌파정당(German Left Party)과<sup>8)</sup> 네덜란드 녹색당(Dutch GrönLinks - Green Left)<sup>9)</sup>의 조직통합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기업조직의 인수 합병에 대한 이론을 차용하고 있으며, 앞의 두 논문과는 달리, 조직통합을 결정하게 만든 요인보다는 조직통합을 결정한 이후의 협상이 성공한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조직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해당 정당 지도부(management team)와 통합협상 실무자 간에 최소한의 상호신뢰(mutual trust)가 있어야 하고, 다음, 조직 간의 상호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통합조직의 구조나 정책강령 등을 협상하는 실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권한과 자율성 내지 재량권(discretionary power)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리즈와 케이스의 분석은 앞의 두 글에서 제외된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3. 조직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방금 살펴본 기존연구의 검토를 통해서 조직통합에 의한 정당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요

- 7) 이들에 의하면, 이 세 가지 변수가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조직유지비용을 절감하며, 해당 정당이나 파벌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거연합보다 조직통합이 유리하다는 점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 중에서도 세 번째 변수인 이념·이미지·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Bélanger and Godbout 2009, 50-51).
- 8) '민주사회당'(Party of Democratic Socialism)과 '노동·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Electoral Alternative for Labor and Social Justice)이 2005년부터 약 2년 동안 교섭을 한 끝에 2007년 중반에 완전히 통합한 정당이다.
- 9) 공산당(Communist Party of the Netherlands), 평화사회당(Pacifist-Socialist Party), 환경주의급진당(Political Radical Party) 그리고 복음주의인민당(Evangelical People's Party) 등의 4개 군소정당이 1970년대 후반 지방선거에서의 공동대응으로 시작하여 1990년 완전히 통합한 정당이다.

인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조직통합은 궁극적으로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체의 목표 지향적 또는 전략적 선택(strategic decision)이다. 조직통합의 (단기적인) 목표에는 재정적 인적 자원 확보를 통한 조직의 유지나 확대, 선거에서의 득표를 제고, 의석점유율 제고(즉 의회 내 다수당 형성), 이념이나 정책 실현(입법화 포함), 유권자 또는 당원에 대한 대표성 강화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전략)으로는 내부개혁, 선거연합, 타조직과의 통합 등이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권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조직해체, 조직개혁, 선거연합, 타조직과의 통합) 중의 하나인 조직통합을 택할 경우 조직 간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sup>10)</sup>

둘째, 조직통합의 당사자인 정당이나 다른 정치사회조직이 내부적으로 하나의 입장으로 통일된 '단일한 행위자'(unitary actor)가 아닌 복수의 행위자(multiple actors)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조직 내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하고, 조직 내 소집단의 존재와 수 그리고 의사결정규칙에 의해 최종적인 의사가 결정된다. 따라서 조직통합을 지지하는 지도부가 구성되거나 조직통합을 지지하는 소집단이 다수파로 등장할 경우 조직통합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조직통합을 추진하는 실무자에게 부여되는 권한(또는 재량권)이 클수록 용이해질 것이다.

셋째, 조직통합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행위자(actor)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조직 간의 이념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해관계가 양립 가능하거나 상호보완적일수록, 신뢰가 강할수록 조직통합은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넷째, 조직통합에 대한 의사결정은 진공상태가 아니라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협(threat 또는 challenge)이나 기회(opportunity)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외부환경의 변화를 포함시켜야 한다. 어떤 종류의 환경변화는 조직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고, 또 어떤 종류의 환경변화는 조직의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선거에서의 패배, 지도부나 당원의 대량 수배 또는 구속, 시민사회의 이념지형 변화(예, 소련 동구의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혁명적 사회주의의 대중적 호소력 약화) 등은 전자의 예가 될 것이고, 당선자 결정방식 또는 의석배분방식에 있어서 최저득표율(threshold)의 하향조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소액정치자금의 제도화,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조정, 조직통합에 대한 여론의 압

10) 예를 들면, 인력이나 재정이 없어 조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을 때, 조직을 해체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고 다른 조직과의 통합을 통해 조직을 유지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어느 대안을 택하느냐는 각 조직의 전략적 결정에 달려 있다.

박 등은 후자의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의사결정권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위협이나 기회를 제공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 조직통합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즉,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든 기회를 제공하는 상황이든 어느 경우에도 조직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조직통합은 최종적으로 각 조직의 변화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전략적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민주노동당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후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먼저,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계열의 관계와 이 두 계열이 민주노동당에 합류하게 된 배경과 요인을 탐색한 다음, 민주노동당 사례분석이 갖는 이론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 II.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민족해방계열의 합류

### 1.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계열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계열의 역사적 기원은 1980년대 학생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권영태 2004). 1980년대 학생운동은 출발부터 둘 또는 그 이상의 입장으로 나누어져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을 벌여 왔다. 1980년대 초반에는 ‘학림-무림’(또는 ‘전망-야비’)의 두 그룹, 1984-1985년에는 ‘멧타-멤시’(MT-MC)의 두 그룹, 1986년에는 민족해방계열(NL)-제헌회의계열(CA)의 두 그룹, 1987년에는 비판적 지지-후보단일화-독자후보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1988년에 민족해방계열(NL)이 제헌회의그룹을 흡수하여 하나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1989년 무렵 민중민주계열(PD)이 등장하면서 운동권은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계열로 나누어졌고 이후 민주노동당에 합류할 때까지 진보운동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권영태 2004; 박헌채·조희연 1989; 채만수·김장한 1990; 이준석 2004a, 2004b, 2004c, 2004d; 박순옥 2004b).

이렇게 형성된 학생운동권 내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계열의 양자 간 대립구도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국내외 사건을 계기로 양대 계열이 내부분열을 겪음에 따라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민족해방계열은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강경투쟁 일변도의 정권타도를 주장하는 한총련의 주류인 ‘주사파’ 지도부를 비판하는 세력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한총련의 민주적 운영, 대중적 통



일운동 모색, 전국연합 중심의 현대적 국민정당 건설'을 내세우면서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자 이들은 결국 1996년 무렵 대대적으로 한총련을 탈퇴하였다. 이에 따라 전대협-한총련이라는 하나의 조직에 묶여 있던 민족해방계열도 '주사파'와 '비주사파'로 분열되고 말았다.

민중민주계열의 경우 1991년 후반기 소련의 공식 해체라는 세기적인 사건이 분열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소련 해체로 진보운동진영 전체가 타격을 받았지만,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을 자신의 모델로 삼았던 민중민주계열에게는 치명타가 되었다.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고(이준석 2004a), 결국 민중민주계열은 사회주의와 노동자계급 중심을 내세우는 PD '제파'와, 사회민주주의와 계급연합노선(내지 민중노선)을 강조하는 '사민주의'파로 분열되었다.

이러한 학생운동권 내 복잡한 대립구도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이나 졸업 후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공장이나 지역사회로 진출하면서 노동현장과 정치·사회운동의 영역으로 확산되었다(진숙경 2008, 164-165). 당시 학생운동에 투신한 이들은 현실경험을 위해서 또는 시민사회의 조직화를 위해 위장취업의 형태로 공장노동자가 되거나 노동(운동)상담소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청년운동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NL-4, NL-6, NL-7, PD-8, PD-9, PD-10). 그 결과 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공장이나 지역사회로 진출한 학생운동 활동가들은 대학 때 습득한 이념과 노선도 함께 가지고 감으로써 학생운동권의 갈등구도를 바깥 사회에 그대로 옮겨 놓았다. 1990년대 이후에 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19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선배 '학출'을 통해서 특정 계열 또는 파벌의 이념과 노선을 학습하게 된다(PD-2, PD-3, PD-5, PD-7, PD-11, NL-9).

이처럼, 학생운동권에서 시작된 복잡한 대립구도가 전 사회영역으로 확산되었고, 대립과 갈등을 초래한 구체적인 이슈와 내용은 달라졌지만 그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과 영역에서 반복되었다.

이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한 요인에는 이념·노선의 차이와 이에 따른 현실진단과 처방의 차이, 조직문화의 차이, 그리고 권력욕(패권주의)이 있었다.

첫 번째,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계열 간에는 적어도 소련의 해체 때까지는 이념과 노선에 있어서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질적 차이가 존재했고, 이후에도 현실과 정치세력에 대한 진단과 대안에 있어서 작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표 2>에서 보듯이, 소련 붕괴 때까지는 반미자주의 민족해방·통일·(일반)민주주의의 실현을 주요 과제로 삼았던 민족해방계열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했으나, 반파쇼·반독점의 계급해방을 주요 과

제로 삼았던 민중민주계열은 소련식 사회주의를 지향했다. 소련 붕괴 이후에는 사회주의를 둘러싼 차이는 사라졌으나 현실의 정치세력에 대한 인식과 관계설정에 있어서의 차이는 여전히 컸다.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해서는 민족해방계열(특히 '주사파')은 남한사회가 본받아야 할 모델로 설정한 반면, 민중민주계열은 '봉건왕조 체제에 지나지 않았고 따라서 극복대상이었다(박현재 · 조희연 1989; 박현재 1990; 박현재 외 1997; 방인혁 2009; 유동렬 1991; PD-2 2010년 1월 14일; PD-3 2010년 1월 12일). 자유주의 정당과 지도자(국민회의의 김대중과 열린우리당의 노무현)에 대해서는 민족해방계열은 일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비판적 지지 또는 연대의 대상으로 간주하였지만, 민중민주계열은 민중민주주의의 실현에 방해물에 지나지 않았고 따라서 비판과 견제의 대상으로 간주했다(김승호 1992).

두 번째, 조직문화의 차이도 대립과 갈등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민족해방계열에 속하는 한 인사는 민중민주계열의 조직문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평등파(민중민주계열)는 상당히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리고 집단주의를 굉장히 원칙적으로 싫어해요 ... 정확히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 평등파에서 자주파를 바라보는 눈은 ... 재들은 무슨 우두머리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는, 애들이 공부는 안하고 ... 이런 생각이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NL-7 2009년 9월 19일).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민중민주계열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어느 한 인사도 자파의 조직문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민중민주계열 내) 정파 간에는 무제한적 사투만이 반복되면서 비실천성과 감정대립만이 난무했고 같은 정파 안에서도 ... '자칭 전위'였던 그들은 선배운동가들을 오히려 지도하겠다는 안하무인격의 자세를 보이기 일쑤였다 ... 이론적으로 이기면 그 운동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죠 ... 지금 생각해 보면 논쟁을 해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데도 말이예요. 운동은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D는 유약한 운동권이었어요(이준석 2001a).

이처럼 민중민주계열에서는 지식과 논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해서 합리적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구성원 간의 인간적인 유대감을 약화시켜 조직을 파편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표 2〉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계열의 이념과 노선의 차이

	민족해방계열	민중민주계열
이념	북한식 사회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소련식 사회주의 = 민중민주주의) → 사민주의
정치노선 (선거전술)	통일전선운동, 민주대연합론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지지	독자정당건설(노동계급 중심의 전위정당 → 진보적 합법대중정당)
내부구성	전국연합(인천연합, 울산연합,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서울연합 등), 민주노총 국민파(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대협-한총련, 전농 등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민중당 → 전보정당건설추진위원회(진정추) → 1995년 민중정치연합 일부 통합한 진보정치연합), 민중정치연합(정치연대), 국제사회주의그룹, 민주노총 중앙파(평등회의), 민주노총 현장파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범자주파: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전국모임	범평등파: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전진), 자율과 연대(사민주의), 다함께, 노동해방실천연대

출처: 유동렬(1991)과 김윤철(2004)을 바탕으로 재구성.

“(민중민주계열의 경우) 사람을 만나면 먼저 조직 기관지를 탁 펼쳐놓는다. 그리고 우리 조직의 전술론, 혁명론은 여기 나와 있는 이컨데 너는 동의하냐. 잘 모르겠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학습을 하고 논쟁을 벌였다. 상대방이 설득당할 때까지 논쟁을 벌였다. 끝까지 설득이 안 되면 조직에서 짜르거나 자기가 알아서 조직을 나갔다 ... 논쟁이 격해질수록 기분이 상했고 설득이나 연대의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 ... 실천이나 인간관계보다는 ‘뚝뚝한 놈’이, 이론적 능력이 더 중요했고 그래서 선배들도 ‘논쟁’을 통해 밀어내고 ‘서열을 매기는’ 것도 가능했다(이준석 2001a).

반면 민족해방계열의 조직문화는 집단주의적이고 위계적이어서 개인의 자율과 인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민중민주계열에 속하는 한 인사에 의하면, 민족해방계열의 조직문화는

위계질서, 연공서열, 선배 앞에서 후배는 말을 안 받는다거나 담배를 안 피운다거나 술도 돌아서 마신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 그러니까 봉건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바가 굉장히 크죠”(PD-4 2010년 1월 14일).

그러나 민족해방계열의 조직문화는 사람을 끌어안을 줄 아는 장점이 있다고 실토했다. 1980~90년대 민중민주계열 학생운동권에 몸 담았던 어느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민중민주계열에서는) 논쟁이 격해질수록 기분이 상했고 설득이나 연대의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 ... 정작 마음을 터놓고 개인적인 고민을 의논하려 찾아갈 선배는 없었다. 그럴 땐 오히려 마음 좋고 술 잘 마시는 NL(민족해방계열) 선배를 찾았다.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을까(이준석 2001a).

이처럼,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계열은 조직문화에서도 융화하기 어려운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 정치·사회운동이나 조직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갈등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민주노동당으로 합류하기 전까지는 민중민주계열과 민족해방계열은 학생회나 노동조합 등에서 주도권(예, 학생회장, 노조위원장)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대립을 했다. 우선, 양대 계열은 총학생회 선거에서 양축이 되어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대학 총학생회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두 세력은 혈전을 벌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해 한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NL은 수박이고, PD는 사과야. 왜 줄 알아? NL은 겉은 파란데 까보면 새빨강고, PD는 빨개 보이는데 까보면 희끄무레하거든.” 그 선배는 NL이었으니 아마도 PD를 알잡아보기 위해 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NL과 PD는 좌파 진영 분열의 원초적 씨앗입니다(대성홍락 2008).

사회운동조직으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민주노총의 경우에도 노조지도부의 조합원에 의한 적선제가 시행되면서 이념과 노선의 차이, 선후배관계 등의 인맥에 따라 정파가 생겼고,<sup>11)</sup> 선거 때만 되면 노조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파 간의 갈등과 이합집산이 빈번했다(조효래 2000).

현장조직의 분화는 동시에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파벌의 형성이고, 각 파벌들 간의 경향이나 활동방식의 차이, 사적인 감정과 대립 등이 선거를 앞두고 조직적 분화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 상호 간의 비판과 반비판 과정에서 생긴 감정적 거리감은 선거

11) 민주노총 중앙에는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 등 정립구도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각 정파내 소집단이 다수 있어, 경쟁구도는 더욱 복잡하다(진숙경 2008, 73-75, 116-119, 136-138).

과정에서 누구를 후보를 내세울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증폭된다(진숙경 2008, 168).

## 2.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민족해방계열의 합류

각 계열에 속하는 주요 조직을 보면, 민족해방계열에는 인천연합, 울산연합, 경기동부연합 등 지역조직의 연합체인 전국연합, 대학생 조직인 한총련, 농민단체인 전농, 그리고 민주노총 내 ‘국민파’ 등이 포함되고,<sup>12)</sup> 민중민주계열에는 진보정치연합,<sup>13)</sup>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연대(준)(정치연대),<sup>14)</sup> 국제사회주의(트로츠키주의자)그룹, 그리고 민주노총의 ‘중앙파’와 ‘현장파’ 등이 포함된다.

민주노동당은 민중민주계열과 민족해방계열의 이러한 다양한 조직들이 결성한 정당이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념·노선과 조직문화가 다르고 진보운동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과 대립의 관계에 있었던 두 계열의 조직들이 일시적인 연대도 아니고 일종의 조직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건설에 동참하게 만든 요인은 무엇일까. 먼저, 그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기로 한다.

민주노동당의 직접적인 전신(前身)은 1997년 10월에 결성된 국민승리21이다. 국민승리21의 중심세력은 민중민주계열의 진보정치연합, 정치연대, 민족해방계열의 전국연합, 그리고 민주노총이 1997년 대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결성한 정당이다. 그러나 민족해방계열의 전국연합은 막상 대선이 시작되자 애초의 방침을 바꾸어 김대중 후보 지지로 돌아서면서 선거 도중에 이탈했다.<sup>15)</sup>

- 12) 민주노총 및 산하조직에는 다양한 성격의 정파조직과 현장조직들이 존재한다. 이른바 ‘국민파’와 ‘범좌파’가 양대 정파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파는 민족자주성, 조국통일 등에 주안점을 두면서 노동자 해방을 지향한다. 반면 ‘범좌파’ 진영은 통일운동 등 국민파가 추구하는 과제를 덜 중시한다. 범좌파(즉 민중민주계열)는 다시 ‘중앙파’(평동회의)와 ‘현장파’(좌파)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좌우파의 중간지점에 있고, 후자는 노동자 계급의 독자노선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극복을 강조한다(진숙경 2008).
- 13) 진보정치연합은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와 민중민주계열의 민중정치연합(민중회의와 (사노맹 후신인) 사회당(추)가 1993년 5월에 통합한 조직)이 통합하여 만든 조직이다(김대현 2010).
- 14) 진보정치연합에 합류하지 않은 민중민주계열의 조직인 민중정치연합의 후신으로 1997년 8월 결성되었다.
- 15) 전국연합 지도부가 김대중 지지로 돌아선 이유에는 한총련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훈교 2011).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 의장 등 핵심멤버들이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 그러니까 굉장히 (이회창과 김대중 후보 간의) 경합이 심하다 하는 압박을 받았던 모양 이고 전국연합 조직 안에서 반발이 심했고요. 그러니까 ○○○, ○○○ 등 전국연합중앙에 있던 분들에게 지역 NL조직, 정확하게 주사파조직들이 (김대중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했어(PD-4 2010년 1월 14일).

정치연대도 당명이나 구호 등에 불만을 가져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이탈하였다.<sup>16)</sup> 그리 하여 민중민주계열의 진보정치연합과 대중조직인 민주노총, 그리고 전국연합의 일부 지역조직이나 민중민주계열의 일부 조직에 속하는 인사들이 국민승리21에 남게 된다(PD-4 2010년 1월 14일; NL-4 2010년 1월 21일). 이들은 1998년 2월 21일 2차 중앙위원회를 개최 하여 선거대책본부 체계에서 정치조직으로 전환을 결정하였고, 민주노총은 5월 20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국민승리21을 확대·재편하여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적극 지원 하고 연대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로서 국민승리21을 대체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후 국민승리21 지도부는 1999년 1월 각계각층 대표자연석회의, 2월 전국빈민연합(준) 대표자회의, 3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4월에는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8월에는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마침내 2000년 1월 29일에는 민주노동당 창당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강령, 당헌, 당규를 채택하고 지도부를 선출함으로써 국민승리21을 계승한 새로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출범시켰다(민주노동당 2000a).

창당 후 첫 공식선거인 2000년 4월 총선에 21명의 후보를 내세워 전국득표율은 2%가 되지 않았으나 울산 동구와 북구, 경남 창원읍에서는 3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은 크게 고무되었다. 이에 총선 직후 6월에 열린 임시당대회에서 전국연합을 포함한 진보정치세력과 농민단체 등 대중조직 그리고 각종 사회운동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을 적극 끌어들이 재창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민주노동당 2000b).

이러한 결정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사무총장(노회찬)을 위원장, 기획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문과 광역 단위별 10여 명을 기획위원으로 하는 재창당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 하반기부터 전국연합, 전농, 민교협, 학단협, 노동자의 힘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주노동당 가입을 적극 설득하였다(민주노동당 2001). 2001년도에도 재창당사업

16) 민주노총도 국민승리21의 해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지만,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자신의 결의에 얽매어 '어쩔 수 없이' 남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송태경 2002).

을 계속하여 전농, 전빈련, 전국연합, 한총련 등의 민족해방계열조직은 물론 비운동권 조직인 한국노총과도 민주노동당 가입을 적극 유인하였고, 사회당 등의 민중민주계열 조직과의 통합도 협의하였다(민주노동당 2002).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노력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민족해방계열의 노선변화와 맞물리면서 결실을 거두게 된다. 민족해방계열의 전국연합은 2001년 9월 충북에서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를 개최하여 '민족민주전선으로서의 진보적 대중정당건설'을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민주노동당을 통해서 실현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2001).

전국연합의 공식적인 결정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에 참여하지 않고 바깥에 있던 민족해방계열 조직들이 본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합류하게 만들었다. 먼저, 조직적으로는 물론 개인자격으로도 민주노동당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천연합이 집단적으로 당에 가입하기 시작했고, 개인자격의 참여를 허용했던 울산연합과 경기동부연합도 조직차원에서 입당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2001년 말 2002년 초에는 대학 총학생회의 전국연합체인 민족해방계열의 대학생조직인 한총련도 민주노동당 참여를 결정하였으며,<sup>17)</sup> 전농과의 협상도 가속도가 붙어 2003년 10월에 그 결실을 보게 된다. 이로서 2003년 말에는 민족해방계열의 모든 주요 조직들은 민주노동당에 참여하게 되었다. 민중민주계열과 민족해방계열의 정파들이 민주노동당과 그 전신인 국민승리21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 3. 분석

그러면, 이념·노선과 조직문화도 다르고 진보운동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경쟁과 대립 관계에 놓여 있었고 상대에 대한 강한 불신감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계열이 민주노동당을 함께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특히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입장을 고수하던 전자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김대중과 그가 속한 정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진보정당에 합류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이고, 노선을 둘러싸고 대립과 경쟁을 벌여왔고 진보세력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즉 진보정당 건설과 성장)

17) 민주노동당과 한총련은 대학생들의 민주노동당 입당을 위해 2001년 9월부터 토론회 개최, 학생회 회의 등을 개최하였고, 한총련에서는 대학생들의 민주노동당 입당을 적극 추진하였다(사람 2002).





가 지연되고 있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로 간주되었던 '비판적 지지세력'인 민족해방계열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민족해방계열 파벌 중 어떤 파벌 즉 '울산연합'과 '경기동부연합'은 창당준비과정 때부터 참여한 반면, 다른 파벌 즉 '인천연합'은 창당 이후 1년 이상 바깥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네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소련·동구의 사회주의국가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전환하고 90년대 중반 무렵 북한사회주의의 위기징후도 점차로 드러남에 따라 양대 그룹이 지향하던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전략적 목표가 설득력을 잃게 되고, 따라서 양자 간의 논란과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인 이념의 차이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양대 그룹이 추구했던 대안사회와 전략이 모두 구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어 이를 이유로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대선 전후한 시기까지는 김대중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선거 전술이나 진보세력의 독자적인 정당의 건설 시기와 성격, 사회운동과 정당운동의 관계 등에 대한 이견과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특히 양대 그룹이 한 정치조직으로 합치 못하게 한 가장 큰 쟁점인 독자적인 진보정당의 건설 시기와 성격에 대한 이견은 남아 있었고, 특히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 또는 민주대연합을 통한 민주정부수립을 주장하는 파벌이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에도 한동안 민족해방계열의 각 조직(전국연합, 한총련, 진농 등)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민족해방계열이 민주노동당에 합류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명분이 상실하게 된 이후였다.

둘째, 억압적인 권위주의체제에서는 정당성과 필요성을 가질 수 있었던 비합법전위정당에 의한 '한국사회의 혁명적 변화'라는 구호는 1987년 민주화, 1989년 동독 정권의 붕괴로 시작된 소련·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로의 전환, 1993년 문민정부에 의한 개혁드라이브를 거치면서 더 이상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의 급변으로 우선적으로 민중민주계열 조직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지만, 시점의 차이는 있었지만, 반미자주화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민족해방계열 조직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1990년대 초반까지도 소련·동구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건재했기 때문인데,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가시화된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위기 때문에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가 외부로부터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자라나면서 민족해방계열 조직도 점차로 약화되기 시작했다(정병호 2004). 그리하여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 진보정치연합을 비롯한 민중민주계열 조직과 전국연합-한총련을 비롯한 민족해

방계열 조직은 공히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PD-4 2010년 1월 14일; 참이슬 2009; 장훈교 2010; 풍경소리 2008). 위기의 징후는 조직력의 급격한 약화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의 창당과정에서 실무협상을 담당했던 한 인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노회찬씨가 (진보정치연합) 대표였는데 ... 사표를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사표를 반려할 수는 없고 해서, 그럼 나도 사표를 낸다고 했고, 사표가 자동으로 반려된 거죠. 그래서 뭐가 활로를 찾아야겠다고 제가 조금 생각을 해서, 제가 책임지고 전국연합하고 민주노총을 꼬시겠다고 ... 제안을 했습니다 ... 그래서 무조건 전국연합을 찾아 갔습니다 ... 진정추 위기와 진정련 때는 굉장히 어려웠죠, 전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 상근자들도 없고 ... 두목들은 ... 그만 둔다고 그러고 ... (아니면) 시골로 내려가서 ... 소리 소문도 없고, 근데 전국연합에 가보니까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판이 ... 그냥 아무 전망도 없었어요. 그냥 있는 거야 ... 본인들 스스로 이거(전국연합) 점점 죽는다 라고 느꼈고 ... 민주노동당이 생기게 된 계기 중의 하나가 운동권 단체들 ... 활동가들 ... 자연사할 것이다 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 그러면 한번 합쳐서 해보자는 식(PD-4와의인터뷰 2008).

전국연합과 경기남부연합은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연합운동의 선진역량이 보수정권으로 편입하고, 주요 정치, 조직적 방침에 대한 이견과 갈등, 민족민주운동과 시민운동으로의 급속한 분화과정에서 지도집행력의 상당 부분이 약화되었다 ... 경기남부연합은 97년 대선을 거치면서 연합 내부에서 제기된 전선운동 강화론과 새로운 정치(정당)조직 건설론이 대립하면서 결국 해소를 선언하게 된다(이창연 2008).

이처럼 조직이 크게 축소된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적 지지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기대할 수 없는 활동가들이 하나씩 조직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비판하고 공격했던 제도권 보수정당 또는 자유주의정당으로 자리를 옮겼고, 어떤 이들은 경실련(1989년 7월 출범)이나 참여연대(1994년 9월 출범) 등과 같은 시민단체로 이동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게 된다. 또한 이들 조직의 활동가 공급처가 되었던 학생운동도 위기에 처함에 따라 이전과 같은 진보운동에 대한 활동가 공급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소련·동구와 북한의 사회주의 붕괴 내지 위기와 1990년대 후반부터 심화된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개혁으로 취업조건이 달라져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학점경쟁, 영어공부와 해외연수, 아르바이트에 매몰되어 혁명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정치조직은 커녕 학생운동조차도 외면했기 때문이다(장석준 외 1997). 이처럼 오랜

동안 경쟁과 대립 관계에 놓여 있던 진보진영의 파벌들이 조직통합을 모색하게 되는 것은 혁명적 사회주의의 대중적 호소력도 사라지고 조직이 극도로 약화된 배경에서였다.

셋째, 민족해방계열이 합류하게 된 배경적 조건으로, 애초부터 민족민주정당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으나 노동조합 등 대중적 기반이 취약하고 비민주적 요소가 남아 있는 등 독자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김대중과 그가 속한 정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견지해오던 민족해방계열이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더 이상 진보세력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NL-5 2010년 1월 22일).

우선,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성명'을 채택함에 따라 민족해방계열이 그동안 고수해왔던 '선(先) 비판적 지지(또는 민주대연합)에 의한 민주정부수립 우선, 후(後) 진보정당 건설'론의 명분이 사라졌고, 다음, 김대중 정부가 '친미'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의 설득력은 더욱 줄어들었으며, 마지막으로, 5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가진 민주노총이 1996년 출범하였고 이러한 거대한 대중조직이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결정한 뒤 국민승리21과 민주노동당 건설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족해방계열이 진보정당의 건설에 반대했던 또 다른 이유였던 '취약한 대중기반'이라는 명분도 그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었다(유범상 2005, 300-316, 320-3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객관적 정세의 변화에 대한 해석과 대응방식에 있어서 민족해방계열 내부의 차이가 있어서 노동조합이나 지역적 기반이 비교적 탄탄한 일부 지역조직이 먼저 국민승리21이나 민주노동당의 건설과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문이 나오고 난 1년 뒤인 2001년 후반부에 조직 전체가 참여하게 된다(PD-5 2010년 1월 12일; 장훈교 2009).

전국연합 내에서 논의하면서 (경기동부연합의 입장은) "... 민주노총이라는 물적 토대가 있는 거다. 토대와 기반이 있기 때문에 당으로 간다 ... (그리고 우리도) 같이 가야지 나중에 가면 이게 이미 자리 잡은 다음에 가면 더 어렵다 ... 저희 지역은 가야 된다는 입장이었죠.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전국연합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간 거죠 ... 전국연합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목인이랄까 그렇게 된 거죠 ... 저희 몇 군대가 먼저 당에 간 거죠 ...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는 지역 전체가 당에 안온 지역도 있는 거예요(NL-4 2010년 1월 21일).

넷째, 양대 계열 조직의 전략적 결정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이념이나 노선 또는 조직문화

의 차이와 그간의 대립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적과의 동거’를 통해서라도 조직을 존립시켜 선거에 도전해 봐야겠다는 강한 의사와 의지(민중민주계열) 내지 독자적인 ‘민족민주정당’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사와 의지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먼저, 민중민주계열의 진보정치연합(진정추)은 1990년대 중반 어떤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조직의 생존 자체가 어려울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정치조직과의 연대 내지 합당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7년에는 민주노총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하고 민중민주계열의 정치연대와 민족해방계열의 전국연합도 끌어들이어 국민승리21을 출범시킬 수 있었다.

97년도 봄에 ... 그냥 무대포로 제가 노회찬 당시 진보정치연합 대표한테 이렇게 할거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노회찬 대표가 반대도 안했고 그냥 ‘한번 해 보시오’ 해서 전국연합과 민주노총을 찾아갔어요.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서 대선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을 했는데 둘 다 흔쾌히 응했죠 ... 그래서 전국연합의 〇〇〇씨, 저, 민주노총의 〇〇〇씨 3인 회의를 만들고, 3인 회의를 점점 키워간 거죠 ... 교수들도 오고 ... 계속 늘어난 거죠. 그래서 국민승리21이 된 거죠(PD-4 2010년 1월 14일).

다른 한편, 민족해방계열의 경우 1987년 이후 항상 김대중과 그가 소속된 정당을 지지하는 방법, 즉 비판적 지지를 통한 민주대연합정부수립을 지향해 왔으나, 일부가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독자후보·독자정당건설’로 입장을 바꾸었다. 특히 전국연합의 지역조직 중 진보정당의 지역기반이 탄탄하고 선거경험도 많은 경기동부연합과 울산연합이 일찍부터 민중민주계열의 진보정당건설에 호응을 했다(김보현 2008, 245). 일부 민족해방계열의 진보정당건설에 대한 입장 변화는 민주노총의 결정에도 자극을 받은 바가 컸다. 민주노총은 199~7년 총파업을 겪으면서 진보정당건설을 당면과제로 설정하여 국민승리21의 결성에 적극 참여하였고, 1997년 대선 패배 이후에도 1998년 5월 대의원대회와 1999년 3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을 계속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자세는 민주노동당의 든든한 인적·재정적 기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유범상 2005, 318, 326-329), 전국연합 등 민족해방계열의 참여를 유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1997년의 국민승리21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끝났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때까지도 민족해방계열 조직들을 장악하고 있던 민주대연합-비판적 지지론자들이

대선 도중에 김대중 지지로 돌아섰고, 노동자계급 중심의 진보정당건설을 주장하는 민중민주계열의 정치연대가 대선 후 이탈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의 일부 지역조직이 잔류한 것에 힘입어 민중민주계열 지도부는 2000년에 민주노동당을 창당하였고, 2000년 총선을 통해서 특히 울산, 경남 창원, 경기 성남 등지에서 제도권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한 뒤 민족해방계열 조직의 입당을 주요 목표로 하는 재창당사업을 추진하였다. 재창당사업의 핵심 내용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대상 당원 가입 추진 및 확대, 민족해방계열의 주요 조직인 전국연합·전농·한총련의 참여 유도, 시민단체와의 연대 강화, 사회당과의 연대·통합 등의 네 가지였다(장훈교 2011, 189-190).

민주노동당은 이 사업을 2000년 후반기부터 2003년 후반기까지 3년에 걸쳐 계속하여, 다른 세 가지 과제의 성과는 미미했으나 민족해방계열의 주요 조직 즉 전국연합·한총련·전농을 당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했다. 민족해방계열의 민주노동당 합류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때마침 이루어진 전국연합의 노선변경 덕택이기도 있고, 민주노동당 지도부를 차지하고 있던 민중민주계열의 유인책 덕택이기도 했다. 앞에서 보았듯이, 전국연합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남한 민주주의의 성격이 서구식의 회민주주의로 변했다는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민중민주전선으로서의 진보적 대중정당건설'을 당면과제로 설정했고, 이를 민주노동당에의 참여를 통해서 실현하기로 한 것이다(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2001). 다른 한편, 민중민주계열 지도부는 전국연합, 한총련, 전농 등 민족해방계열의 민주노동당에의 참여를 확실히 하기 위해 부문별로 당의 의결기구인 대의원과 중앙위원 중 일정비율을 할당해 주기로 했으며,<sup>18)</sup> 민중민주계열의 일부 당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집행기구인 최고위원회 선거제도를 민족해방계열이 요구한 1인 7표제도 받아들였다.<sup>19)</sup>

18) 2000년 창당 때 민주노동당은 노동부문(민주노총)과 농민부문에 각각 전체 대의원과 중앙위원 중 30%, 3%를 할당해 주기로 했고, 전농이 가입한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28%, 14%로 변경되었다(PD-4 2010년 10월 30일 보충 전화인터뷰).

19) 민주노동당은 2003년 11월 임시당대회를 개최하여 3년간의 재창당사업을 마무리 짓고 그간의 성과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도부구성 과 당직·공직후보 선출방식, (대의원과 중앙위원에 대한) 부문별 할당제 등을 바꾸었다. 대의원 직선의 대표(1인)와 부대표(4인), 사무총장(1인)으로 구성된 최고지도부를 당원직선의 12인 최고위원과 당원직인 의원대표의 13인의 집단지도체제로 바꾸고, 여성명부 4인과 일반명부 3인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당원 1인이 각각 4표, 3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이 1인 7표제라는 것이고, 민족해방계열이 제안하고 민중민주계열 중 민주노총 중앙파가 수용함으로써 제도화되었다(PD-7 2008년 11월 3일).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국민승리21과 민주노동당의 건설을 주도했던 민중민주계열의 진보정치연합이 자신의 이념이나 노선 또는 조직문화에 가까운 사회당과 통합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훨씬 더 큰 (어쩌면 양립하기 어려운) 전국연합, 한총련, 전농 등과 같은 민족해방계열의 조직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2001년 말에 시작된 사회당과의 통합 협상이 그 다음 해 3월에 중단된 이유의 하나가 민주노동당이 조선노동당(과 추종세력인 주사파 민족해방계열)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라는 사회당의 요구를 민주노동당이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기이한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창당 당시 민주노동당의 중심세력이었던 민중민주계열 인사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은 것은 '원내진출'과 이에 필요한 지지자와 대중조직(정치적 사회운동조직)의 흡수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연합의 대상을 결정했다. 즉, 이념이나 노선에서는 가깝지만 지역적 기반이나 재원 등의 자원이 빈약한 민중민주계열의 사회당보다는 이념이나 노선에서는 멀지만 이러한 자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연합, 전농, 한총련 등 민족해방계열이 창당주도세력에게 더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이다(PD-5 2010년 1월 12일; PD-11 2010년 10월 31일 전화인터뷰).<sup>20)</sup>

둘째, 진보정치연합의 주요 인사들은 민족해방계열 조직들이 '비판적 지지노선'을 포기하여 연대의 중요한 걸림돌 하나가 제거되었다고 판단했다(PD-5 2010년 1월 12일).

셋째, 민족해방계열의 조선노동당에 대한 '종속성'('종북주의')과 조직문화 등으로 이유로 일부 지역과 당원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sup>21)</sup> 민중민주계열의 협상 담당자들은 민족해방계열이 민주노동당에 일단 합류하면 이들의 북한에 대한 태도나 조직문화도 바뀔 것으로 낙관했다(PD-4 2010년 1월 14일; PD-10 2010년 7월 26일). 그것은

20) 더구나 사회당이 통합의 조건으로 내세운 '조선노동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는 득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통합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진정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사회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말았다(PD-4 2010년 10월 30일 전화인터뷰).

21) 전국연합과의 민주노동당 합류가 조직통합의 형식이 아니라 그때까지 입당하지 않은 전국연합의 지역조직(특히 인천연합과 울산연합) 구성원들을 개인자격으로 입당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앙위원회 등과 같은 공식결정기구를 거치지 않고 사부총상이 협상을 책임졌다. 그리고 전국연합과의 입당 유도 협상에 대해서 중앙당 내에서는 반대가 없었고, 일부 지역이나 당원의 문제제기는 '왜 공식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하느냐'하는 절차에 대한 것이었다(PD-4 2010년 11월 1일 전화인터뷰).

당 강령에 북한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명시해놓은 데다가,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다수파인 민중민주계열이 민족해방계열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PD-4 2010년 10월 30일 전화인터뷰).<sup>22)</sup>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민중민주계열은 이념이나 노선의 양립가능성도 고려했지만 민주노동당의 생존과 성공이라는 현실적 이해관계를 더 중시하여 사회당보다는 민족해방계열과의 통합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 III.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념과 노선이 가까워졌다. 소련·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북한의 위기,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 등은 그동안 대립과 갈등의 주요 요인을 제거했고 이념적 거리와 노선도 근접시켰다.

둘째,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민중민주계열은 취약한 지역의 대중적 기반과 활동가들을 얻어 조직(진정추)의 생존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고, 민족해방계열은 독자적인 민족민주정당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몰락, 북한 사회주의의 위기,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 등과 같은 객관적 여건의 급변은 위협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혁명적 사회주의의 대중적 설득력을 크게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직 기반마저 흔들어 놓아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보정치운동을 포기하고 조직을 해체하거나, 아니면 이념이나 노선을 수정하거나 다른 조직과 통합하여 생존과 성장을 모색해야 했다. 다른 한편, 1996~7년 총파업에 따른 민주노동의 진보정당 건설에의 참여결정,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전국구 의원 배정방식 관련 선거법에 대한 위헌결정과 뒤이은 선거법개정 등은 양대 계열의 통합에 유리한 배경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조직해체나 일시적인 (선거)연합이 아닌 조직통합을 통한 생존과 발전 전략을 선택하였다. 민중민주계열은 민족해방계열을 민주노동당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협상책임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주어 신속하게 협상을 성공시키려

22) 민족해방계열이 계속 소수파로 남을 것이라는 당시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PD-4 2010년 10월 30일 전화인터뷰).

고 했으며, 협상책임자는 그때까지 남아있던 양 계열 간의 이념이나 조직문화 차이를 과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해방계열이 요구한 제도를 대폭 수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중민주계열과 민족해방계열의 민주노동당으로의 합류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대북관계나 인식 등과 같은 노선-정책의 차이나, 과거의 격렬한 대립과 경쟁으로 인한 상호불신과 부정적인 이미지 등을 해결할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이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조직의 생존과 성공이라는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조직통합 이후 파벌 간의 경쟁과 갈등 격화와 궁극적인 당의 분열이었다.

끝으로, 본 논문이 갖는 한계를 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국민승리21에서 민주노동당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진보정당을 분석한 단일사례분석이기 때문에 다른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 조직통합을 위한 협상을 담당했던 인사와 직접 면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상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투고일 2011년 3월 31일

심사일 2011년 4월 11일

게재확정일 2011년 5월 2일

## 참고문헌

- 권영태. 2004. “운동사회 논쟁 정리 2 - 엔엘-시에이 논쟁.” <http://cafe.daum.net/jinbomanual/EVL/2?docid=Nhbb|EVL|2|20040925110447&q=%BF%EE%B5%BF%BB%E7%C8%B8%B3%ED%C0%EF%20%C1%A4%B8%AE&srchid=CCBNhbb|EVL|2|20040925110447> (검색일: 2010. 11. 5).
- 김대현. 2010. “청와대서 여의도까지 한국정치 안방 차지한 운동권 출신들.” 『주간조선』 2127호, 22-25.
- 김보현. 2008.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내부정치: ‘연대의 결여’와 ‘지체된 성장.’” 『기억과 전망』 18호, 232-268.
- 김윤철. 2004. “민주노동당의 ‘집권전략 논쟁.’” 『역사비평』 통권 68호 가을, 65-80.
- \_\_\_\_\_. 2009. “민주노동당 침체의 동학.”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논문.



- 대성홍락. 2008. “전교조 좌파진영의 사상적 뿌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NL과 PD.” <http://blog.naver.com/gla22?Redirect=Log&logNo=80059722956> (검색일: 2010. 11. 20).
- 민주노동당. 2000a. 『민주노동당 창당대의원대회』(1월 29일).
- \_\_\_\_\_. 2000b. 『입시당대회』(6월 11일).
- \_\_\_\_\_. 2001. 『2001 정기당대회』(2월 24일).
- \_\_\_\_\_. 2002. 『2002년 정기 당대회』(3월 16일).
- \_\_\_\_\_. 2003. 『2003년 입시 당대회』(11월 1일).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2001.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 자료집』(9월 22~23일).
- 민중의 소리. 2008. “노선이 아니라 실력이 문제.” 2008년 3월 4일. <http://www.vop.co.kr/2008/03/04/A00000198186.html>(검색일: 2010. 11. 6)
- 박순옥. 2004a. “90년대 학생운동사 <6> 96년.” 『대학생신문』(9월 17일).
- \_\_\_\_\_. 2004b. “90년대 학생운동사 <7> 97년.” 『대학생신문』(9월 17일).
- 박현채 외. 1997. 『한국사회구성체논쟁 3』. 서울: 한울.
- 박현채. 1990. 『한국사회구성체논쟁 2』. 서울: 죽산서당.
- 박현채·조희연. 1989.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 II』. 서울: 죽산.
- 방인혁. 2009. 『한국의 변혁운동과 사상논쟁』. 서울: 소나무.
- 사람. 2002. “2002년 한총련 대선방침 중상안.” <http://cafe.daum.net/danga96/19Ot/4?docid=KkPh|19Ot|4|20020907224300&q=%C7%D1%C3%D1%B7%C3%20%B9%CE%C1%D6%B3%EB%B5%BF%B4%E7%20%C2%FC%BF%A9&srchid=CCBKkPh|19Ot|4|20020907224300>(검색일: 2011년 1월 12일).
- 사회당 상임집행위원회 최고회의. 2002. “논평: 제11차 중앙위원회 특별결의와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http://bs.sp.or.kr/2007/board/bbs/board.php?bo\\_table=comment&wr\\_id=5&page=19](http://bs.sp.or.kr/2007/board/bbs/board.php?bo_table=comment&wr_id=5&page=19) (검색일: 2010. 11. 6).
- 송태경. 2002. “민주노동당—그 성장의 비결과 한계에 대해.” <http://kdip.org/1905637>(검색일: 2010. 11. 10).
- 신망예. 2008. “민노당 분열로 본 진보정치운동단체 흐름도.” <http://cafe.daum.net/jeodanglove/BbmB/108?docid=1AG0|BbmB|108|20080410225134&q=%C1%A4%C4%A1%BF%AC%B4%EB%20%B1%B9%B9%CE%BD%C2%B8%AE21%20%C0%CC%C5%BB>(검색일: 2010. 12. 1)
- 오혜린. 2004a. “90년대 학생운동사 <4> 94년.” 『대학생신문』(9월 17일).
- \_\_\_\_\_. 2004b. “90년대 학생운동사 <5> 95년.” 『대학생신문』(9월 17일).
- 유동렬. 1991a. “좌익혁명세력의 전략전술과 투쟁양상.” 『공안연구』 15호, 56-85.
- \_\_\_\_\_. 1991b. “국내 좌익운동권의 계파별 실상분석.” 『공안연구』 13호, 68-99.

- 이영기. 2001.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의 이념논쟁.” 『오마이뉴스』(12월 6일).
- 이준석. 2004a. “90년대 학생운동사 <1> 91년.” 『대학생신문』(9월 17일).
- \_\_\_\_\_. 2004b. “90년대 학생운동사 <2> 92년.” 『대학생신문』(9월 17일).
- \_\_\_\_\_. 2004c. “90년대 학생운동사 <3> 93년.” 『대학생신문』(9월 17일).
- \_\_\_\_\_. 2004d. “90년대 학생운동사 <9> 학생회 연대체 운동.” 『대학생신문』(9월 17일).
- 이창언. 2008.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경기남부연합을 기억하며.” <http://satyagraha21.blog.me/90028248392>(검색일: 2010. 12. 12).
- \_\_\_\_\_. 2011. “민족해방(NL)노선의 확산과 진보정치운동의 지체—거중연합과 전민항쟁노선이 낳은 진보정치의 지체와 왜곡.” 조현연 외 편. 『한국 진보정치운동의 역사와 쟁점』, 서울: 한울.
- 임현진. 2009. 『한국의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석준 외. 1997. “대학사회의 위기와 학생운동의 진로.” 『경제와 사회』 33호(3월), 57-90.
- 장훈교. 2011. “1997년 이후 민족해방계열의 진보정당운동사: 전국연합계열을 중심으로.” 조현연 외. 『한국 진보정치운동의 역사와 쟁점』, 서울: 한울.
- 정운광. 2008. “진보정당운동 위기의 원인.” [http://www.jinbo21.net/g4/bbs/board.php?bo\\_table=free&wr\\_id=598&page=59](http://www.jinbo21.net/g4/bbs/board.php?bo_table=free&wr_id=598&page=59)(검색일: 2010. 11. 2).
- 조현연. 2009. “민주노동당의 분당 과정 연구.” 『기억과 전망』 20호, 71-108.
- \_\_\_\_\_. 2011. “한국 민주화와 진보정당운동: 1987년 민주화 이후 2004년 17대 총선까지.” 조현연 외. 『한국 진보정치운동의 역사와 쟁점』, 서울: 한울.
- 조효래. 2000. “기업별 노동조합의 내부정치—H자동차노조의 현장조직들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6권 1호, 155-187.
- 진숙경. 2008. 『노동조합 내부 민주주의와 현장조직—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현장조직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참이슬. 2009. “진보신당, 1996년 개혁신당을 재탕하려 창당한 것 아니다.” [http://www.newjinbo.org/xe/?document\\_srl=276179&mid=bd\\_member\\_discuss](http://www.newjinbo.org/xe/?document_srl=276179&mid=bd_member_discuss)(검색일: 2010. 12. 10).
- 채만수·김장한. 1990. 『한국사회통일전선논쟁—현단계 통일전선운동의 쟁점과 그 전망』, 서울: 죽산.
- 풍경소리. 2008. “민주주의민족통일 경기남부연합을 기억하며.” <http://cafe.daum.net/tongilm/e/2f6c/27?docid=xOtl|2f6c|27|20070208132544&q=%B9%CE% C1%D6% C1%D6% C0% C7%B9%CE% C1%B7% C5%EB% C0%CF% C0%FC% B1%B9%BF%AC% C7%D5%20%B0%E6%B1%E2%B3%B2%BA%CE%BF%AC% C7%D5&srchid=CCBxOtl|2f6c|27|20070208132544>(검색일: 2010. 11. 12).
- Applebaum, Steven H., Joy Gandell, Harry Yortis, Shay Proper, and Francois Jobin. 2000.

- “Anatomy of a merger: behavior of organizational factors and processes throughout the pre- during- post-stages (part 1).” *Management Decision* 38. No. 9, 649-661.
- Bélanger, Éric and Jean-François Godbout. 2009. “Why do parties merge? The Case of the Conservative Party of Canada.” *Parliamentary Affairs* 63. No. 1, 41-65.
- Boucek, Françoise. 2009. “Rethinking Factionalism: Typologies, intra-party dynamics and three faces of factionalism.” *Party Politics* 15. No. 4, 455-485.
- Coffé, Hilde and René Torevlied. 2008. “Explanatory Factors for the Merger of Political Parties.” Center for the Study of Democracy, UC Irvine. <http://escholarship.org/uc/item/1nd4n3j9> (2011. 5. 27).
- Lees, Charles, Dan Hough, and Dan Keith. 2010. “Toward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Party Mergers: Operationalizing the Cases of the German Left Party and the Dutch Green Left.” *West European Politics* 33. No. 6, 1299-1317.
- Mair, P. 1990. “The electoral payoffs of fission and merger.”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 No. 1, 131-142.
- Sartori, Giovanni. 1976. *Party and party systems: A framework for analysis*. vol.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Formation of Political Party through the Merger of Political  
Movement Organizations:  
The Case of Democratic Labor Party of Korea

Youngtae Jung · Inha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find some factors which contributed to the merger of two rival political movement organizations — National Liberation faction and People's Democracy faction. These two rival organizations, which had distinctive ideologies and platforms, and organizational cultures, had competed to take a hegemonic control over radical political-social movements since the late 1980s. In the late 1990s, however, they joined a new leftist party — People's Victory 21. And, then, those organizations of National Liberation faction, which left People's Victory 21 in the middle of 1997 Presidential election, decided to return to a newly-formed left party — Democratic Labor Party — in September 2001 and continued to remain within the party. Using party documents, internet sources, and interviews with leading party activists, this paper found sever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merger of rival organizations, for example, reduction in an ideological distance between them accompanying the collapse of communism, fear of organizations' dissolution, congruence in interest of the two factions — need for its own party from the part of National Liberation faction and need for grass-root organizations and sub-national leaders from the party of People's Democracy faction, and successful negotiation for merger. Although successful in merging two rival organizations, both factions were constantly in conflict because they ignored or underestimat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such as attitude toward North Korea and organizational culture. They did not work together to solve or harmonize these differences seriously, and finally split into two different parties in 2008.

**Keywords:** party formation, organizational merger, political movement organization, ideological position, political strategy, organizational culture